

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 후속조치

2019.6.25(화) 14:30 이후  
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 간담회 - 모 두 발 언 -

2019. 6. 25.

금 융 위 원 장  
최 종 구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## 1 인사말씀

- 안녕하십니까?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.
  - 바쁘신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 
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님을 비롯한,  
경쟁도 평가위원님, 금발심 자본분과 위원님,  
금융투자회사 대표님들과 유관기관 참석자 여러분께  
감사 말씀드립니다.
- 오늘 간담회는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 중  
‘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’과  
관련된 세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.
- 올해는 기능별 규제체계 도입과 투자자보호 규제를 정비하여  
현행 금융투자업 인가체계의 근간을 마련한  
자본시장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된 해이기도 합니다.
- 자본시장이 혁신금융의 선도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 
혁신적 금융투자산업의 진입·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해  
금융투자업 특유의 역동성을  
발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금일 간담회는  
금융투자업자의 인가정책에 대한 그간 평가와 함께  
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인가정책 개선에 대한  
업권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.
  - 전문가 여러분들의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부탁드립니다.

## 2 개선 방안 주요 내용

-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 증권사 수에는 큰 변동없이 60여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
  - 신규 증권사 진입이 활발하지는 않았지만, 기존 증권사는 자기자본을 확대하는 등 점차 대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
  - 신규로 진출한 16개 증권사는 인가정책방향에 따라 전문·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진입하였습니다.
- 이에 반해, 자산운용사는 2016년 진입 요건 완화·등록제 변경 등 인가정책 변화가 노후자산 운용 등 자산운용산업 수요 증대와 맞물려 2008년도 15개사에서 2019.3월 207개사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.
- 지난 10년의 금융투자산업 변화를 볼 때, 현행 인가체계는 업권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고 동일 기능 내 동일 규제를 적용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.
  - 다만, 인가체계가 다소 복잡하고 업무추가에 따른 절차와 시간이 부담되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.
- 이에 따라, 인가정책의 성과를 되돌아보고, 금융투자산업이 혁신성장 지원과 모험자본 공급의 핵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인가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

## <신규진입 활성화>

- 우선 신규진입 활성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 
금융투자업의 역동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.
  - 경쟁을 제한하는 인가정책을 정비하겠습니다.
    - ① 1그룹·1증권사 정책을 폐지하여  
기존 증권사의 신설·분사·인수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
    - ② 그 동안 유지해 온 전문화·특화 정책은 폐지하여  
신규증권사도 종합증권업을 통한 진출을 허용하겠습니다.
  - 공모운용사에 대한 1그룹·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,  
사모운용사에서 공모운용사로 전환시 수탁금액 요건을  
1/2수준으로 완화하여 유연한 성장경로를 마련하겠습니다.
- \* 펀드수탁고 + 일임계약고 : 3천억원 → 1.5천억원 등
- 증권사의 인가와 등록에 있어  
전문투자자·일반투자자 구별에 따른 자기자본 차등을 없애고  
필요자기자본을 현행 전문투자자 자기자본요건  
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.

## <기존 금투업자의 업무확대·조직변경 등 지원>

- 다음으로, 기존의 복잡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된  
인가단위를 크게 단순화하고 심사 요건을 합리화하겠습니다.

- 현재는 금융투자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 
원칙적으로 업무단위별 인가를 통해서 진출하고  
업무단위 추가(add-on)시에도 인가를 통해서만  
업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.
- 이를 개선하여,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를 통해 진출하되,  
동일한 업종 내에서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 
등록제로 전환하여 보다 손쉽게  
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- 이렇게 개선하면, 투자중개업은 23개 인가단위에서  
1개 인가단위 · 13개 등록단위로 축소되고  
투자매매업은 38개 인가단위에서  
5개 인가단위 · 19개 등록단위로 조정될 것입니다.
- 또한, 최초 진입시 인가는 현행처럼 운용하되,  
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 
경직적 심사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.
- 증권사가 새롭게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,  
진입단계에서 사회적 신용요건\*에 대한 심사를 거친  
기존 대주주는 심사를 면제하고,  
신규 대주주만 사회적 신용요건을 심사하겠습니다.
- \* 금융관계법령 위반, 공정거래법 위반,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 등
- 또한, 현행 단순 합산방식의 인력요건을 완화하여  
추가되는 업무가 기존 업무와 동일분야인 경우에는  
추가 인력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- 등록을 통한 업무추가시 대주주 본인의 경우,  
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\*는  
사회적 신용요건상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 
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\* 공정거래법에 따른 벌금형 등

- 앞으로 금융관련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제재는  
사회적 신용요건 심사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것을  
인가단계에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.

- 아울러, 금융투자업자가 구조조정·분사·인수 등의  
조직형태 변경과정상 복잡한 절차도 단순화하여  
현행 4단계 인가 및 승인에서 2단계로 조정하는 등  
원활한 조직형태 변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# <인가·등록 관련 심사관행 개선>

- 인가·등록시 다소 경직적으로 운영해 온  
심사관행을 혁신하겠습니다.
- 특히, 인가·등록과 관련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 
불확실성을 해소하겠습니다.
- 인가·등록 절차에 「최대 심사중단기간」을 설정하겠습니다.
- 감독기관의 조사·검사와 검찰의 수사 등으로  
절차가 무기한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- 인가·등록 신청서 접수 후 착수된 금감원 검사는 원칙적으로 심사·중단 사유에서 제외하겠습니다.
- 공정위·국세청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, 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- 검찰 수사 중인 사항의 경우, 특경가법 위반 등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아 6개월 이내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.
- 대주주변경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도 신규심사 대상 대주주만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대주주 변경승인 절차와 대상을 명확히 하겠습니다.
- 다만, 인가정책 개선으로 신규진입·업무확장이 활성화되어 자본시장의 경쟁이 촉진되고 역동성이 제고되면, 경쟁에 도태되는 금융투자회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
- 금융투자업자의 인가취소·파산 등의 경우, 고객자산인 투자자예탁금이 투자자에게 제대로 반환될 수 있도록 명확한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### 3 마무리 말씀

- 10년 전에 마련된 자본시장법은  
기능별 인가체계 도입과 투자자를 구분하여  
투자자 보호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 
매우 혁신적인 시도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.
- 그러나,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
저성장·고령화 등 환경변화와 함께  
Fintech, 4차 산업혁명 진행 등  
금융투자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.
-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금융투자산업도  
신속히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- 금번 인가정책 개선은 금융투자업자가 혁신을 선도하고  
혁신성장을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있어  
금융투자회사가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 
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- 금일 제시된 전문가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 
저희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.
- 오랜 시간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, 활발하게 논의에  
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
- 감사합니다.